

칼럼



국정 지지율과 민심, 그리고 대통령의 말과 태도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중견 선진국이다. 현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를 선언했다. 서구의 프랑스, 영국, 호주 등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역량을 지녔다. 한국은 2021년 기준 통합 국가역량(state capacity)은 대략 10위 정도로서 경제는 10위, 군사력 6위, 정치력 11위, 과학기술 7위, 문화력 12위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의 올해 순위에서 한국이 63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작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대만은 7위, 중국은 17위로 상승했다. '부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가 역량'이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 운영 경쟁력이 가장 크게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6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긍정' 47.6%, '부정' 47.9%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dead-cross)'가 나왔다고 여론조사업체 알앤서치가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5.9% 동반 급락했다. 7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34.5%, '잘못하고 있다'는 60.8%로 나타났다. 7월 15일 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2%, '잘못하고 있다' 53%를 발표했는데, 6월 첫째 주 발표한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4% 발표와 거의 정반대가 되어 있다.

70대를 제외하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과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앞서고, 긍정평가는 5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도어스테핑 발언 논란, 검찰총장 공석으로 검찰 인사 수차례 단행과 검찰 등 편중 인사 논란, 이준석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분,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의 불화설, 김건희 여사 관련 잡음 등이 거론된다.

국가 경쟁력도, 대통령 국정 운영도 과학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업체도 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

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업체도 있어서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여론조사 문항과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조사하느냐, 자동응답 전화(ARS)로 하느냐,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하느냐, 어느 지역을 편중적으로 하느냐 등 수많은 방법과 설계, 미묘한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는 지지율에 대통령실 관계자 말처럼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일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는 최소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 민심(民心)의 흐름과 추세가 나타나기에 집권층과 정치인들은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날,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보좌하는 참모진들도 잘못이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판단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하늘 같은 국민 뜻을 무시하는 오만과 외면이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 앞에 마음이 거북해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 국민의 질책을 겸허히 경청하고 계속 고쳐나갈 것이다.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어야 했다.

임기 시작 초반 70%, 80%대 지지율을 유지했던 전(前) 대통령들은 말할 것도 없고,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보다도 뒤진 32% 지지율은 참으로 드문 일이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국정운영 동력이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정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 정치와 국정 핵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말과 태도를 고치고 잘 해야 한다. 대통령의 간단한 말 한 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김건희 여사의 행동 하나에도 국민들은 예리하게 지켜 보고 예리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 특히 인사, 물가 등 민생, 교육과 세금, 남북문제 등에서 시민들의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일을 보게 될 때, 배(侍, 船)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백성들은 배를 뒤집어 엎는 성난 파도가 될 수도 있다.

기고

보행자 교통안전의 시대! 선진교통 문화의 지름길!

박은유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안전속도 5030 현수막과 골목골목 설치된 과속 카메라, 우리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인 시대에 살고 있다.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때,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은 일시 정지 해야한다.

세 번째는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일시정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 차량신호 적색, 보행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 ▶ 차량신호 녹색, 보행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시 우회전하면 된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행자 위주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왜 보행자를 더 강조할까? 2021년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율이 35%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라는 것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다.

갖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워하지 말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만 기억하면 된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행자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햇갈리는 우회전 방법, 원칙을 지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자”

기고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자로 시행되었다. 12일부터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서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된 법안이 12일자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운전자들이 많고, 경찰의 계도 활동에 단속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원칙만 명심하면 된다.

우선,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할 때도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가장 많이 햇갈려하는 부분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운전자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것인데, 이 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단, 보행신호등만 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명확하다.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분다면 원칙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어려울 것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법이기 때문에 항상 유념하고 운전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